

102주년 3.8 여성의 날 맞이 요구안 해설 자료집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반대!

여성의 권리로 여는 102주년 3.8 여성의 날

요구안 |

여성 노동유연화 가속시키는 퍼플잡·여성해고반대!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 강화!

4대강 예산 반대! 축소된 민생 복지 예산 확보 및 강화!

낙태단속강화 반대! 출산 강요 반대!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쟁취!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의 권리는 식량주권 보장으로!

장애여성, 이주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의 노동권 보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2010 지방선거, 여성의 권리 실현하는 여성정치 세력화!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사회당,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102주년 3.8을 맞이하며

3.8 여성의 날이 10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102주년 여성의 날은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는 어떤 요구를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작년, 재작년과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혹은 돌림노래처럼 반복되는 나아지지 않는 여성의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점차 여성의 권리는 후퇴되어 가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지만 때로는 역사를 반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여성이 몸에 대한 권리를 또다시 통제하려 드는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이 닥치면 다가오는 여성에 대한 해고의 위협과 저임금 단시간 노동에 대한 강요는 우리가 막아내야 할 과제이자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이기도 합니다. 102주년 3.8 여성의 날을 맞이한 우리에게 이제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20대 여성은 그 비정규직 일자리 마저 없어 실업난에 시달리고 40,50대 여성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 여성 노동자의 슬픈 얼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 편견과 국가의 통제로 인해 원치 않는 아이를 강제로 낳아야 함에도 아무런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오늘날의 여성의 현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농민임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생산의 주체’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농민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성으로서 제국주의에 희생당했던 일본군 위안부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가슴에 품어안고 102주년 3.8 여성의 날을 시작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이 사회의 온갖 차별과 멸시들을 날려버리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성 여러분! 투쟁입니다 ^^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

목차

4

3.8 여성의 날 유래 | 국제 여성의 날의 기원

7

여성노동 | 3.8 세계여성의 날, 왜 우리는 모이고 싸우려하는가?

10

퍼플잡 |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과 퍼플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3

낙태권 | 낙태단속 강화 반대! 출산 강요 반대!

16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50만 명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19

여성농민 | 3.8 여성의 날 2010 여성농민 요구안

21

반성폭력 | 두 눈 크게 뜨고 큰 소리로 성폭력 없는 세상 선언하기

국제 여성의 날의 기원

오늘날 3월 8일은 세계적인 경축일이다. 이제 국제 여성의 날 행사는 다양한 단체들이 치르고, 때로는 기업들의 특별 관측일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 여성의 날은 이와는 사뭇 다른 기원을 갖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 여성의 날” — 러시아 혁명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최초의 국제 여성의 날 행사를 이렇게 불렀다.

첫번째 국제 여성의 날 행사는 1911년에 치렀다. 국제 여성의 날의 원래 명칭은 ‘국제 노동 여성의 날’ 이었고, 사회주의자들이 여성 노동자의 투쟁을 조직하고 축하하기 위해 그 필요성을 호소한 데서 시작했다.

국제 여성의 날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독일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클라라 체트킨이었다. 그녀는 1908년 혹심한 착취에 맞서 싸운 뉴욕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리기 위해 1910년 국제 사회주의 회의에서 3월 8일을 국제 여성의 날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1908년 3월 8일, 수백 명의 여성 봉제 노동자들이 뉴욕시에 있는 럽거스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아동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조건에 항의했고, 노조 결성의 자유와 여성의 투표권을 요구했다. 대부분이 이민자였던 그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여성 노동자들은 온 가족이 한 방을 쓰는 혼잡한 셋집에서 힘겹게 살았다. 기업주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실과 바늘에도 돈을 청구했고 심지어 작업용 의자에도 요금을 매겼다.

실과 바늘

여성 노동자들의 분노는 다음 해에 “2만 명의 반란” 으로 알려진 13주 연속 파업으로 폭발했다. 이 파업은 미국에서 여성 봉제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투쟁이 고조되는 전환점이 됐다. 봉제업 전체에서 노조 가입이 폭발적으로 증대했다.

파업에 참가한 여성들의 전투성은 아주 놀라웠다. 많은 파업 참가자들이 10대였고 일부는 10살밖에 되지 않았다. 여성 노동자들은 깡말랐고 일부는 굶주려 몹시 허약했다. 그러나 그들은 추운 겨울 내내 흙먼지와 눈보라를 맞으며 피켓 대열(파업 사수대) 속에 있었다. 그들은 경찰의 구타와 폭행으로 온몸이 멍들고 피를 흘리면서도 파업을 방어했다.

그 파업을 묘사한 것으로 ‘2만 인의 반란’ 이라는 노래가 전해져 온다.

1909년 겨울의 암흑 속에서
우리가 피켓 대열에서 추위에 떨고
피흘릴 때
우리는 세상에 보여 줬네 여성들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떨쳐일어나 여성의 힘을 통해 승리했네.
만세! 1909년의 블라우스 제조공들
피켓 대열에 서서
지배자들의 권력을 분쇄하고
갈 길을 제시하고 사슬을 끊으며.
우리는 1910년에 계속 싸운
남성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네
우리 어깨 걸고 헤쳐나가자
국제여성봉제공노조(ILGWU)의
지도를 받으며.

파업 노동자들은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은 평등을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됐다.


1911년 3월 유럽에서 벌어진 첫번째 국제 여성의 날 시위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여성의 물결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도처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소도시뿐 아니라 작은 마을의 회관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독일의 많은 대도시에서 최대 3만 명의 여성이 행진에 참가했다.

이 행진에서 외친 주요 요구는 보통선거권이었다. 당시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다. 당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가난한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제한된 투표권을 요구했기 때문에 보통선거권 요구는 매우 중요했다. 사회주의자들은 페미니스트들의 요구에 반대해 재산에 관계 없이 모든 성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보통선거권을 요구했다.

국제 여성의 날은 보통선거권과 평등과 연관된 다른 쟁점들을 둘러싼 운동을 통해 국제 노동계급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서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계급 여성들의 시위는 1915년까지 매년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 벌어졌고 전쟁이 발발해 시위가 금지당할 때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국제 여성의 날은 1917년 러시아에서 경축됐다. 1917년 3월 8일(러시아 구력으로 2월 23일)에 벌어진 여성 노동자 시위는 2월 혁명을 촉발했다.

러시아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과 함께 “억압받는 사람들의 축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10월 혁명을 통해 여성

A large, stylized pink floral illustration serves as a background for the page. It features large, layered petals at the top and bottom, with a central cluster of smaller, more detailed flowers and leaves. The style is reminiscent of a woodcut or a detailed line drawing with a pink color palette.

해방의 가장 커다란 장을 열었다.

혁명의 결과,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완전한 투표권이 부여됐고 이혼이 자유화됐다. 여성의 노동권이 법제화됐고 남성과 동등한 임금이 지급됐으며 전면적인 유급 출산휴가제가 도입됐다. 공동 식당, 공동 세탁소, 탁아소, 유치원 등 그 동안 여성을 짓눌러 왔던 가사 노동을 사회가 책임지는 조치들이 시행됐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시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나라조차 도달하지 못한 것이었다.

3.8 세계여성의 날, 왜 우리는 모이고 싸우려하는가?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일이 아니라 투쟁의 날입니다.

오는 3월 8일은 102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102주년이니까 1908년 3월 8일, 미국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서 싸웠습니다. “임금을 인상하라!, 10시간만 일하자!,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정치적인 권리도 빼앗긴 채 살수는 없다고 거리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날입니다.

그리고 1910년 독일의 사회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 클라라 체트킨은 ‘제 2회 국제여성사회주의자들의 회의’에서 연례 세계여성의 날을 제안합니다. 이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고발하고,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요구했던 여성사회주의자들의 투쟁의 예를 따라 고안한 것이었습니다. 3월 8일의 주된 근거는 러시아 달력으로 1917년 2월 23일(그레고리력으로 3월 8일) 러시아 여성노동자들이 궁핍과 전쟁, 차리즘에 반대하여 벌인 총파업이었습니다. 이 날 섬유공장 여성노동자들은 그들의 공장을 뒤로 하고 거리로 나왔고, 그럼으로써 러시아 혁명의 승리를 가져온 혁명적 행동을 촉발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국가별로 시작된 년도와 날짜는 달랐지만, 세계여성의 날은 1911년 이후 줄곧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매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사회변혁에 대한 여성들의 활발하고 끊임없는 참여 속에서 기념되었습니다.

오늘날 여성의 날은 마치 발렌타인데이처럼 남성에게 꽃이나 초콜릿을 선물받는 정체불명의 기념일 정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3.8 세계여성의 날은 단지 이런 방식으로 기념하고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여성의 70%가 비정규직, 저임금,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고통받지만 ‘아이 낳는 기계’가 될 것을 강요받는 오늘날 한국 여성의 현실은 우리가 투쟁을 그만둘 수 없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한국의 여성들, 안녕하십니까?

경제가 나아진다는 뉴스에서 떠들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걱정은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사상 최고 실업률, 치솟는 물가, 실질임금하락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에서, 집에서 체감하는 생활고는 1998년 IMF때보다 더 심각하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든 일을 해서 살림을 꾸려가려하지만, 여성들의 생존권, 노동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례에 비춰볼 때 경제위기에 여성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가장 먼저 쫓겨나가고 점점 더 열악한 저임금의 비정규직, 비공식 일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이는 IMF시기 남성노동자는 임시직에서 취업이 감소한데 반해, 여성노동자는 상용직에서 취업이 감소했던 사례, 2009년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서 (남성 취업자는 증가한데 반해) 여성 취업자 수가 9만명 이상 줄었다는 수치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에서 예측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는 당장 우리 주변의 여성노동자 투쟁 사례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명지대에서 길게는 10년을 넘게 일해 온 ‘일반조교’ 직 노동자들이 ‘재정악화와 슬립화, 비정규직법’을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그 직제가 2년마다 쫓겨야하는 ‘행정보조원제’로 변경된 사례가 그렇고, KBS에서 견학,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이 ‘외주회사’로 전적을 강요받아 해고된 사례가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업무와 직제가 단기계약직으로, 외주화로 바뀌는 일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폭력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투쟁하지 않고 그저 물러선다면, 현재와 같이 비정규직이 만연한 사회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일자리마저 보전하기 힘들게 하는 이명박 정권의 각종 정책과 공격들이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여성을 위한 일자리’ 랍시고 선전하는 보육, 간병 등 영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단시간, 저임금 일자리로 한 달에 100만원도 안되는 임금이 고작입니다. 간병노동자, 요양보호사는 하물며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퍼플잡’은 어떻습니까. 여성에게 ‘직장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단시간근로제’를 공공부문, 공무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구상인데, 말이 좋아 퍼플잡이지 ‘파트타임, 시간제’를 여성들에게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그나마 여성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던 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이런데도 우린 잠자코 지켜만 봐야 할까요? 여성노동자의 일자리가, 현상이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알려내고 싸워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단시간근로제’ 즉 파트타임, 시간제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드는 이유는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느니 파트타임으로 일하라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실제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여성들이 일을 그만둘까요? 여성노동자들이 그토록 요구해왔던 공보육시설이 어느 동네에나 있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면, 임신 출산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사장이나 동료들의 눈초리나 차별이 없이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여성이 꼭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바꿀 수 없으니, 아니 바꾸지 않을 테니, 여성들이 알아서 하거나 정 힘들면 직장생활을 축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긴 아이들 무상급식조차 못하게 하는 국가이니 말 다했죠. 자신의 생계와 경제적 독립을 위해, 또는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자아실현을 위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건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이들이 미래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존재라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여성들은 아이들을 믿고 맡길 데가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난 후 다시 취업하려 할 때 비정규직 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중장년 여성들을 저임금의 비정규

직으로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자격증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또래의 여성들도 피해갈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여성모두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된다', '여자는 결혼 안하면 먹고살기 힘들다' 는 말들은 여성에게 결혼은 먹고사는 문제, 삶의 질과 직결되어있다는 사실을 직시한 표현들일 것입니다.

남성 대비 63%의 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현실,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모성이 제약되는 현실, 그런데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공격만 해대는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권,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철저히 박탈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낙태 시술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낙태를 금지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발상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껏 낙태 시술로 수익을 챙겨오던 의사들이 이제야 낙태를 안하겠다고 선언을 어떻게 봐줘야할지... 당장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시급히 낙태를 해야하는 여성들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위험천만한 시술을 감당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담한 상황에 맞서 낙태 단속 중단, 낙태권을 요구하는 흐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출산, 육아에 대한 권리와 사회적 책임은 보장하지 않고, 아이 낳을 의무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맞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명박 정부의 여성 정책 반대! 여성의 권리로 여는 102주년 3.8 전국여성대회"에 모여 투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성 노동유연화 강화시키는 유연근무제 여성해고반대!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 강화!

4대강 예산 반대! 축소된 민생 복지 예산 확보 및 강화!

낙태단속강화 반대! 출산 강요 반대!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쟁취!





이명박 정부의 여성고용 정책과 퍼플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I. 이명박 정부의 여성고용정책

1. 한국 여성고용의 양과 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근 10년간 49% 수전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남녀 간 임금격차 또한 OECD최하위 수준으로 남성노동자의 임금 대비 여성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2001년 65.1%에서 2007년 66.4%로 약간 변화하였으나 이 역시 변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IMF 이후 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여성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2. 이명박 정부의 주요 여성고용정책

-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일과 가족의 양립"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원인(가사 및 육아부담의 사회화 부진, 지나치게 큰 남녀 간 임금격차, 채용 및 승진상의 남녀차별)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특정한 여성 집단(고학력,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시스템만을 구축하고 있다.
- 현재까지 정부가 마련한 여성일자리는 도우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간병인 등 사회서비스일자리에 집중('08년 여성참여인원 9만4천명, 전체의 83.9%), 희망근로('09년 참여인원 14만 3천명(58.1%)) 등 저임금직에 집중되어 있다.
- 이명박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근무직종(퍼플 잡, Purple Job)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한국(9.3%)이 OECD평균(15.5%)에 비해 단시간 근로 비율이 크게 낮아서이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II. 유연근무제(퍼플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유연근무제 실시 배경 및 방식

- 실시 배경 : 경력단절예방 및 일자리창출,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책으로 등장하였다.
- 실시방식
 - 2010년부터 시간제 근무 공무원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며 단시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활용기업 발굴,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2. 유연근무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원칙

- 변화된 경제 및 고용환경(상품시장의 불확실성, 서비스업 증가, 여성고용증가, 고실업, 노동력 재교육 및 재훈련 요구)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유연근무제도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유연근무가 여성고용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도입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 유연근로제도는 단순히 여성을 위한 단시간 일자리를 다수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원하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 관련정책) 6세 이하 아동을 위한 공보육 시설의 지속적 확충방안이 필요하다. 퍼플잡이 남녀 모두를 위한 일자리라 하여도 보육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여성 일자리화 할 가능성이 크다.
 - 유연성에 대한 강조가 단시간근로를 통해 근로시간을 파편화시키는 데 그친다면 노동자의 유연성과 종속성이 동시에 증가되어 노동의 질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 적합한 유연성 확보의 방안이 보다 다차원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정규직 전일제 노동자와의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비율보상체제의 원칙을 확고하게 강제해야 한다.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 역시 단시간 근로자에게 차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유연근무제 도입 시 보완해야 할 과제

1) 제도적 보호체계

-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노동자가 고용, 임금, 근속, 복지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2) 단협을 통한 통제

-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동수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연근무제의 신청⁷과 관련 조치들에 대해 심의토록 해야 한다.

- 유연근무제 시행에서 남녀의 성별 통제가 없어야 하며 선택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유연근무제에서 정규근무로의 전환이 자유로워야 한다.

3) 민간기업 대책

- 여성부의 유연근무제 설명자료에는 민간기업에 대한 대책은 없다.

- 또한 시행사례가 대기업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중소기업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사례 중 단시간 근로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좋지 않은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4) 육아등 복지부 관련 정책과의 병행

- 공보육시설의 확대,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기능을 확대해야 하며 가족간호, 노인간병등 돌봄서비스의 확대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5) 여성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할 것

- 각국의 ‘파트타임제도’는 남녀간 유급노동과 무급 노동의 분배를 재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녀가 함께 돌봄 노동에 참여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며 우리 나라도 그렇게 적용되어야 한다.

낙태단속 강화 반대!

출산 강요 반대!

한국사회 '낙태'를 둘러싼 현실

낙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낙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현실이 다시한번 드러났다. 형법에서 낙태죄를 규정하여 불법화 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14조에서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허용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협소한 규정으로 인해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오랜기간동안 사문화되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암묵적으로 낙태시술을 하고 있으며, 낙태를 결정하게 된 여성들은 금지도 허용도 아닌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정과정에 도움도 받지 못하였으며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많은 이들이 경험하였듯이 한국에서는 수십년간 인구조절의 목적으로 낙태를 사용했고, 그것의 주체는 국가였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몸을 출산 통제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랜기간 가부장적 문화, 호주제, 부계혈통주의, 순혈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기제로 작동해온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성폭력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신고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의 성과 몸에 대한 편견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성간의 평등한 성관계는 요원하며 피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낙태를 많이 하는 국가라는 현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불법낙태단속'이라는 최근의 움직임

올해 초 프로라이프 의사사회에서 낙태 시술 병원 3곳을 고발하면서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되었고, 낙태를 둘러싼 현실이 악화되고 있다. 현재의 논란은 낙태에 대한 법적 허용의 문제와 생명권에 대한 옹호로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낙태를 직접 경험하는 여성들의 경험은 제대로 발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낙태시술을 거부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조차 경찰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비용또한 다섯배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계와 일부 낙태 근절을 말하는 진영에서 주장하는 생명권은 그 자체로 옳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생명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 논의해야 한다. 언제부터 생명의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권리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생명의 권리라는 것이 단지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를 넘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면, 단순히 낙태를 죽음과 삶의 이분법으로 사고해선 안된다. 낙태를 결정하는 어떤 여성도 그러한 이분법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맥락과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은 태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고,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과 태아는 대립한다고 전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결정권을 위해

인구정책과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역설적으로 여성은 낙태를 결정할 ‘자유’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성관계, 피임에서부터 출발해 육아까지 연결되는 임신과 출산을 결정한 권리가 확보된다는 것은 여성이 낙태를 결정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임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을 폭넓게 인정하고, 안전하게 의료적 조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놓는 것이다. 여성의 결정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인프라만을 강조하는 것은 출산강요정책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여성의 결정권이 제대로 의미를 발휘할 수 없다. 임신과 출산, 나아가 섹스와 양육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그 결정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동시에, 충분히,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낙태단속을 사고하는 것을 당장 중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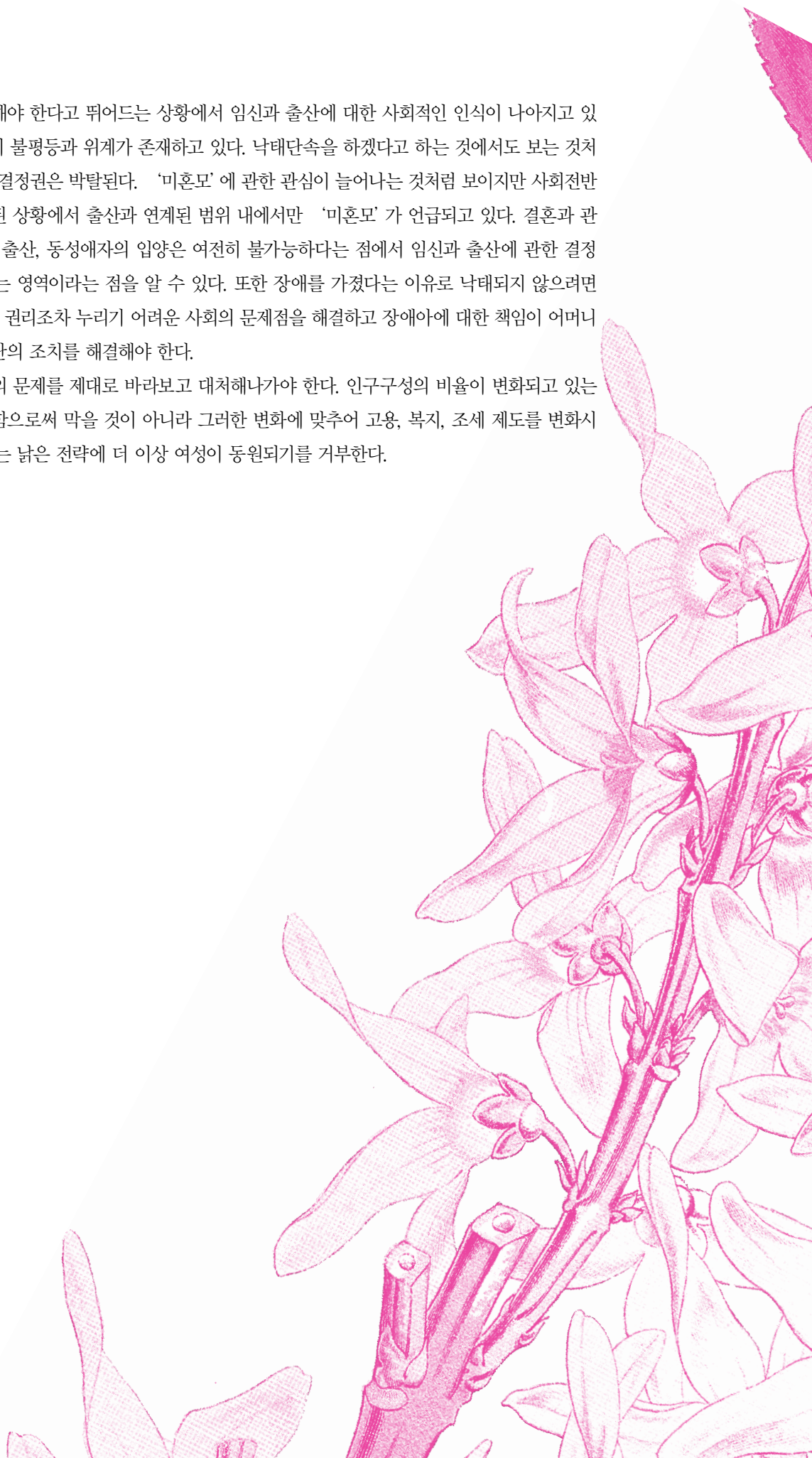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가져왔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법과 유리된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낙태를 둘러싼 조건을 개선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의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시한을 태아 28주에서 24주로 줄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정부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낙태단속을 언급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논의도 낙태단속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낙태단속과 출산강요의 연계는 절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단지 여성을 더욱 곤궁하게 몰아가는 두 가지의 해악일 뿐이다.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인구의 위기로 회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이미 한국의 국가적 위기로 기정사실화되었다. 하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인 양극화, 고용불안, 일과 보육에 대한 여성의 이중부담, 가족의 변화에 대해 제대로 바라보고 성평등과 아동의 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내버려둔 채 이명박 정권 들어 노골적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현물지원, 주택지원, 조세지원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절대로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양극화와 계급불평등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회성 출산축하금 몇십만원으로 출산을 유인하겠다고 하는 것에 코

웃음만 나올 뿐이다.

모두가 저출산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뛰어드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불평등과 위계가 존재하고 있다. 낙태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서도 보는 것처럼 임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결정권은 박탈된다. ‘미혼모’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전반적인 차별시정 정책이 실종된 상황에서 출산과 연계된 범위 내에서만 ‘미혼모’가 언급되고 있다. 결혼과 관련이 없는 출산, 레즈비언의 출산, 동성애자의 입양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권은 위계와 차별이 존재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낙태되지 않으려면 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조차 누리기 어려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아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결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대처해나가야 한다. 인구구성의 비율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함으로써 막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고용, 복지, 조세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인구가 국력이라는 낡은 전략에 더 이상 여성이 동원되기를 거부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입법해결을 촉구하는 50만 명 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세계 2차 대전 중 일어난 끔찍한 여성폭력문제인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요구하며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19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UN과 ILO등의 국제기구는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반인도적 범죄로,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의 책임 이행을 수차례 권고하였고, 2008년부터 일본, 미국, 한국의 시의 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가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가 연이어 채택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책임 회피 속에 대부분 80세가 넘는 피해자들은 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상처와 아픔을 안고 하루하루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마침 일본은 2009년, 54년 만에 정권이 바뀌는 획기적인 정치적인 변화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내각은 지난 자민당 정권에 비해 진일보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한일양국 정상회담 때 일본 하토야마 총리는 “올바르게 역사를 직시하고, 보다 가까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도 하토야마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한 바 없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금액의 연금수당 지급과 독도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는 교육지침 발표 등 실망스러운 소식만 전해지며, 선불리 일본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토야마 연립정권 출범 후 일본에서는 2010년 1월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3월까지 예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4월경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과거사 문제가 핵심의제로 다루어져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압력활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2010년은 한반도가 일본제국주위에 의해 강제 병합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올해는 진정으로 한·일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의 기초를 마련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국민의 약 1%에 해당하는 50만 명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힘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또한 “일본 국민들이 요구한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위한 입법을!” 이라는 구호 아래 일본 인구의 1%에 해당하는 12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일본정부와 일본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나아가 재발방지 등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한국정부와 한국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 등 한일 외교적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루속히 시행하라!!

하토야마 정부와 일본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50만 명 서명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각 단체 지부 및 회원들에게 서명 동참 제안, 독려
2. 3월 말까지 서명 캠페인 전개
3. 서명 용지 취합 후 정대협에 전달

※ 서명용지 요청 및 문의 : 안선미 팀장(전화. 02-365-4016 팩스. 02-365-4017)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1만인 건립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피해자들은 용기 있게 증언을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과거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게 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녀들의 용기 있는 고백을 희망으로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인 그녀들이 우리 곁에서 모두 떠나기 전에 일본군 '위안부' 명예와 인권을 위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 박물관을 통해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고, 다시는 인류역사에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하여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그 속에서 폭력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알려내며 연대하여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 20여 명이 정부로부터 받는 생활비를 조금씩 떼어 모아 주춧돌기금으로 내 주신 것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을 위한 첫 성금이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2003년 12월 18일, 정대협은 할머니들의 희망이 촛불처럼 퍼져나가길 바라며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점화식을 가졌습니다. 할머니들의 마음은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여 점화식 후 1년이 지난 2004년 12월 16일에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건립위원회가 공식 발족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여년이 지난 2005년 10월 25일에는 서울시에서 서대문독립공원 안의 자그마한 땅을 박물관 부지로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었고, 문화재청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박물관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성금 모금이 시작되었고 2008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희망의 터다지기”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60여명이 참석하여 박물관 건립을 향한 의지들을 모아주셨고, 해외 각지에서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날 함께 한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함으로써’ 무슨 일이라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김복동 할머니가 ‘적어서 미안하다.’며 1천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모금이 저조한 우리의 상황에 다시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일본에서도 지난 2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일본건립위원회]를 발족하고, 1억엔(약 14억원)의 모금목표를 정하여 열심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1만인 건립위원이 되어주십시오. “10만원 x 1만인 = 10억원”** 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10만원을 후원하는 건립위원 1만인 참여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35억원 건축비는 우리들 민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일본군'위안부'피해 생존자들과 유사범죄사례의 피해자들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려내고, 우리 후세들에게 평화와 여성인권교육의 장이 될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사업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 후원에 함께 하신 분들은 박물관 내외의 기부자의 벽에 이름이 새겨져, 박물관의 역사와 함께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겨집니다.

※ 문의 : 김동희 사무국장 (전화. 02-365-4016 팩스. 02-365-4017)

3·8 세계 여성의 날

2010 여성농민 요구안

1.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의 권리는 식량주권 보장으로!

여성농민은 당당하게 농사짓는 여성을 말한다. 남들이 우리를 농촌부녀, 농촌여성, 농가주부라 부르던 시절, 우리는 스스로 여성농민이라고 말했다.

“누가 붙여주지 않은 우리 스스로 이름 지어 부른 여성농민.

역사와 농업생산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여성농민이라 부르기로 했지요.

단순히 농사만 지어 나만 잘 살자고 했으면 ‘여성농민’이라 이름 짓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그 이름이 불릴 때 그렇게 눈물 나게 벅차지도 않았겠죠?

더불어 잘 살고, 생명의 소중함과 생산의 위대함을 증명하며 살아온 역사이기에

그 이름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2009 <전국여성농민대회>를 마치고 정미옥씨가 쓴 글)

여성농민은 농업노동자? 농업경영자? 농가주부?

그나마 농업법인을 만들려면 300평의 자기소유 땅이 필요하다. 대표이사는 300평의 본인소유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300평 정도의 땅이라도 본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여성농민은 많지 않다. 노동자들은 정규직 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을 한 대가가 임금으로 지급되면 자신의 노동가치를 환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농민들은 30년 일을 했어도 자신의 노동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 50년을 일해도 여전히 그냥 ‘농가주부’ 일 뿐이다.

‘주부’ 여성농민들이 주부인가? 아니면 농업경영자인가? 아니면 농사꾼, 즉 농업노동자인가? 경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재해사고 시 판정도 다양하다. 어떤 보험사는 주부로, 어떤 보험사는 일용직기준으로 판단한다. 여성농민은 신분이 모호하다.

현재 여성농민은 농업인구에서 농업인력의 50.7%를 구성하고 있으나 무보수 가족 종사라고 간주되고 있다. 여성농민의 93%가 직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농업 종사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여성농민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82%는 실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여성농민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성농민의 경우 직업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할뿐더러, 가사노동과 농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면서도 노동가치가 저평가되어 상/재해시에 도시의 가사종사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고 있다. 농업의 범위와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법률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실정에서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농업인의 인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산의 주체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민에 대한 법적,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생산의 주체로 여성농민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식량주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식량주권이란 식량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리는 농민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될 때만이 식량주권이 실현될 수 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식량공급은 농민들의 생존이 지속가능할 때만이 가능하다. 농산물을 생산해 내기 위한 비용을 보장하고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농가소득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역먹을거리의 우선 공급, 소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의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만 한다.

두 눈 크게 뜨고, 큰 소리로 성폭력 없는 세상 선언하기!

지난 민주노총 김00 성폭력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혹자는 민주노총만의 문제로만 보기도 하지만, 이는 운동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가부장적 문화와 위계적 질서구조에서 벌어진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부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어떤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노조의 단골 노래방까지 소문이 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뿐입니까? 공개적으로 사건화 되지 않았을 뿐이지 곳곳에서 성폭력 사건은 발생하고,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에 급급해합니다. 일상적인 폭언, 폭행은 곳곳에서 난무합니다. 이토록 폭력적인 문화에서 우리는 성평등을 10년째 이야기해왔습니다. 그것의 성과는 평가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규정과 규약, 가해자에 대한 징계만 남아있을 뿐 조직의 반성과 혁신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반성폭력 운동을 진행해왔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반성폭력 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수준으로 매년 비슷한 내용의 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성폭력 운동은 세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깔아, 입닫아, 아무것도 하지마”

그것만 기억하면 핵심은 다 익혔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동지애적 관점, 이는 우리가 민주노조 운동을 시작하면서 주장해왔던 우리 운동의 근본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동지에 대한 동지 “애(愛)”,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상처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민주노조 운동을 시작했을 때의 동지에 대한 관점이자 인간에 대한 기본 연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눈깔아, 입닫아, 가만히 있어’ 일까요?

운동사회에서 소수자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제기하기 위해서 기간의 자신이 속해있던 조직과 혹은 동지들과 투쟁해왔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조직도 있고 이제 그런 내홍을 다 겪어낸 조직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과정에서 함께 하는 동지들이 이해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과정과 문화를 공동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폭력 사건의 주변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직의 구성원들을 늘 소외의 과정을 겪어왔고 현재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조직

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조직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조직이기도 하고, 가해자의 조직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건의 가피해자가 같은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그것의 정도는 더 심하게 느껴질 공산이 큼니다. 이 때 조직이 취해야 할 태도는 택일이 아닌 양면의 모습을 다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하나의 사건은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조직의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조직이 그간의 이러한 조직내의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었거나 무지몽매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직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조직으로서도, 가해자의 조직으로서도 조직은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직 내 규약과 규정을 만들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규약과 규정은 화석처럼 굳어져 그것의 의의를 조직의 성원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이해하는 사람들도 마치 성전처럼 글자 그대로를 맹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해결은 지지부진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과 징계로 마무리 짓는 일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결국 해결보다는 '처리'의 관점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게 아니면 일상적인 조직의 문화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조직에 대한 개인의 고도의 헌신성과 조직 내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문화에서 개인은 힘이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연대와 투쟁을 시작해야 하는 운동사회가 자신의 조직 내에서는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것 또한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조직 내 다양한 개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소통, 그리고 평등주의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애(愛)로부터 고민을 출발해야 합니다.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이 속한 조직을 공동체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너무나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직 내 지리멸렬한 논쟁과 공분을 지속하게 될 겁니다. 또한 조직의 문화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피해자는 고통받을 것이고 반성폭력 운동은 소수만의 운동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 첫발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102주년 3.8 여성의 날이 우리에게 그 첫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02주년 3.8 여성의 날에 반성폭력 운동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거리로 나와 싸운 지 10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운동사회의 반성폭력 운동은 단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지난 시간들이 우리에게 게 준 수많은 과제들을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